

‘맨큐의 경제학’ 따라 읽기 5

조세의 귀착(歸着)과 종합부동산세

글. 권태혁 아리랑국제방송 기술센터 부장

중앙정부부터 조그만 마을의 군(郡)지역 지방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부는 도로, 교육, 국방 등 공공의 목적에 사용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을 거둔다. 이처럼 세금은 중요한 정책수단이고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번 달에는 세금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조세의 귀착

어떤 지방정부가 매년 가두행진, 불꽃놀이, 지역 유명인들의 연설 등으로 구성된 아이스크림 축제를 연다고 가정하자. 이 행사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이 지방정부는 아이스크림 판매에 개당 0.5 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자. 이러한 방침이 알려지자 두 로비 그룹이 행동에 들어갔다. 전국 아이스크림 소비자연대는 소비자들의 생계가 빠듯하니 판매자들이 세금을 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전국 아이스크림 제조업협회는 회원사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느 나라든 결론은 뻔하다. 시장은 타협책으로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세금을 절반씩 내도록 하자고 제안한다.

이 제안을 분석하려면 간단하면서도 심각한 질문과 마주한다. 정부가 어떤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그 부담은 누가 질까? 그 재화를 구입하는 소비자인가, 그 재화를 판매하는 공급자인가? 소비자와 판매자가 세금을 나누어 부담한다면 각각의 몫은 어떻게 결정될까? 앞의 예에서 시장이 제안한 것처럼 정부가 세금 부담의 몫을 단순히 법으로 정할 수 있을까, 근본적인 경제변수들에 따라 그 몫이 결정될까? 조세 부담의 배분에 관한 이러한 질문들을 경제학자들



은 조세(租稅)의 귀착(歸着)이라고 한다. 이번에도 수요와 공급 모형을 이용하여 조세의 귀착에 관해 예상과는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공급자에 대한 과세(課稅)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세금이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앞에서 언급한 지방정부가 법을 제정하여 아이스크림 공급자에게 개당 0.5달러의 세금을 부과했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3월과 4월에 이미 살펴본 수요 공급곡선과 그 곡선들의 탄력성을 통해 분석해보자. 먼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중 어느 곡선이 이동하는지 살펴보고,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판별한다. 마지막으로, 곡선의 이동이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1단계 : 공급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었으므로 세금은 우선 아이스크림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부과된 것이 아니므로 주어진 가격에서 아이스크림 수요량은 변화가 없다. 반면에 세금으로 인해 아이스크림 사업의 수익성이 감소하므로 아이스크림의 공급곡선이 이동한다.

2단계 : 공급자에게 부과된 세금은 아이스크림 생산과 유통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모든 가격수준에서 공급량이 감소한다. 따라서 아이스크림의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 경우 공급곡선이 얼마나 이동할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아이스크림 1개당 0.5달러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판매자가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받는 금액은 0.5달러만큼 줄어든다. 만약 시장가격이 개당 2달러라면 공급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은 1.5달러로 하락하므로 판매자는 시장가격이 0.5달러 하락한 것으로 보고 공급량을 결정할 것이다. 공급자들이 세금부과 이전과 같은 수량으로 공급하려면 세금 부담을 상쇄할 수 있도록 개당 0.5달러만큼 가격이 높아져야 한다. 따라서 [그림 1]에 표시된 것처럼 판매

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곡선이 S1에서 S2로 세금부과액 0.5달러만큼 왼쪽(보기에 따라서는 위로)으로 이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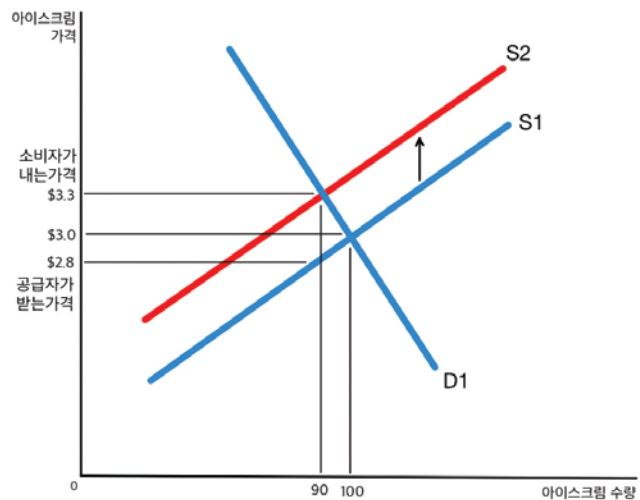


그림 1. 공급자에 대한 과세

3단계 : 공급곡선의 이동 결과 우리는 처음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비교할 수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세금이 부과되어 새로운 균형이 형성되면 아이스크림의 균형가격은 개당 3달러에서 3.3달러로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100에서 90으로 감소한다. 세금으로 인해 구입자들의 구입량과 공급자들의 판매량이 감소했으므로 시장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이제 조세의 귀착 문제로 돌아가서 누가 세금을 부담하는지 살펴보자. 비록 공급자들이 세금 전액을 납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세금을 부담한다. 세금이 부과된 후 시장가격이 3달러에서 3.3달러로 상승했으므로 소비자들은 전에 비해 개당 0.3달러를 추가로 더 내고, 따라서 이들의 후생수준은 하락한다. 즉, 소비자들의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는 뜻이다. 한편 공급자들은 세금부과 이전보다 높은 3.3달러를 받지만 세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가격은 $2.8 (= 3.3 - 0.5)$ 달러로 세금부과 이전의 가격인 3달러보다 낮아졌다. 따라서 공급자들의 후생수준도 이전보다 낮아진다. 정부나 지방정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공급자와 소비자가 세금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소비자에 대한 과세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이번에는 재화의 소비자들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앞에서 소개한 대로 지방정부가 아이스크림 소비자에게 개당 0.5달러를 납부하도록 법을 제정했다고 가정하자.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3단계 접근 방법을 적용해 보자.

1단계 : 이 세금은 우선 아이스크림의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세금이 부과되어 주어진 가격에서 아이스크림 공급자들의 경제적 유인(誘因)에는 변

화가 없으므로 공급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반면에 소비자들은 이제 아이스크림 공급자들에게 값을 지불해야 할 뿐 아니라 정부에 세금도 납부해야 하므로 아이스크림의 수요곡선은 이동한다.

2단계 : 소비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아이스크림은 가격이 오른 것과 같은 상황이 되므로 각 가격수준에서 소비자들의 수요가 줄어든다. 따라서 [그림 2]에서와 같이 왼쪽(보기에 따라서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이 경우 수요곡선이 정확하게 얼마나 이동할지 판단할 수 있다. 아이스크림 개당 0.5달러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구입자의 가격은 실질적으로 개당 0.5달러만큼 상승하는 셈이다. 이것은 시장균형가격이 얼마가 되는가와와는 무관하다. 예를 들어 시장가격이 개당 3달러라면 실질적인 소비자가격은 이제 3.5달러가 된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포함한 구입가가 중요하므로 세금이 0.5달러 부과되면 마치 시장가격이 그 금액만큼 상승한 것처럼 소비량을 조절할 것이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소비자들이 세금부과 이전과 동일한 수량의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도록 하려면 가격이 0.5달러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금에 의해 수요곡선 D1에서 D2로 정확하게 세금액(0.5달러)만큼 아래로 이동한다.

3단계 : 세금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최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비교해보자. [그림 2]에서 아이스크림의 균형가격은 개당 3달러에서 2.8달러로 하락하고, 균형거래량은 100에서 90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세금으로 인해 아이스크림의 시장규모가 줄어든다. 또 소비자와 공급자가 세금을 나누어 부담한다. 공급자들은 세금부과 이전보다 낮은 가격을 받는다. 한편 소비자들은 공급자들에게 낮은 가격을 내지만, 세금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가격은 3달러에서 3.3달러로 증가한다.

[그림 1]과 [그림 2]를 비교하면 놀라운 결론에 이른다.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나 공급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나 효과는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물론 정부가 최초로 세금을 부과했을 때는 세금을 공급자 혹은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하겠지만, 시장 참여자가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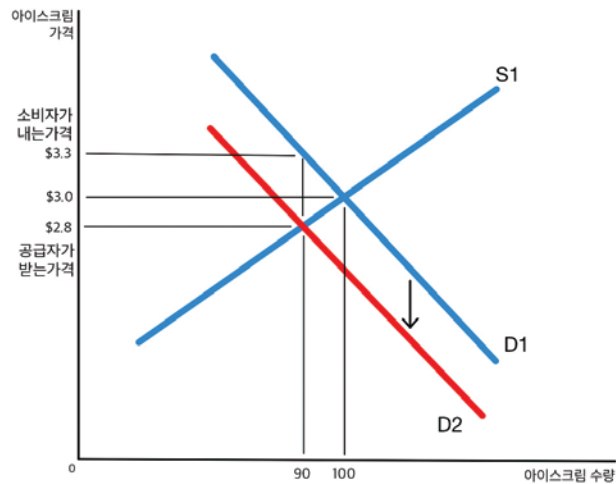


그림 2. 구입자에 대한 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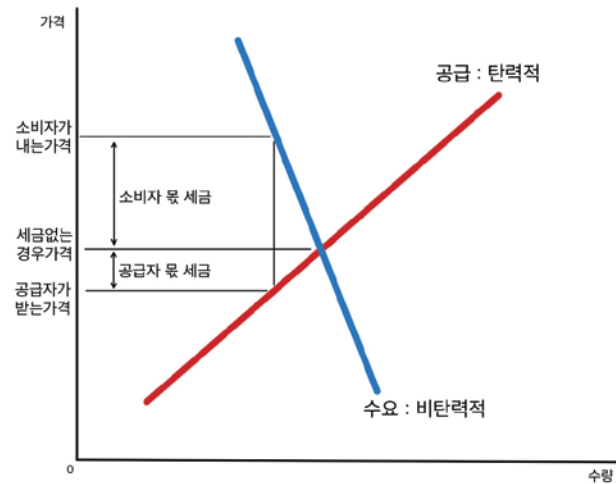


그림 3. 세금부담의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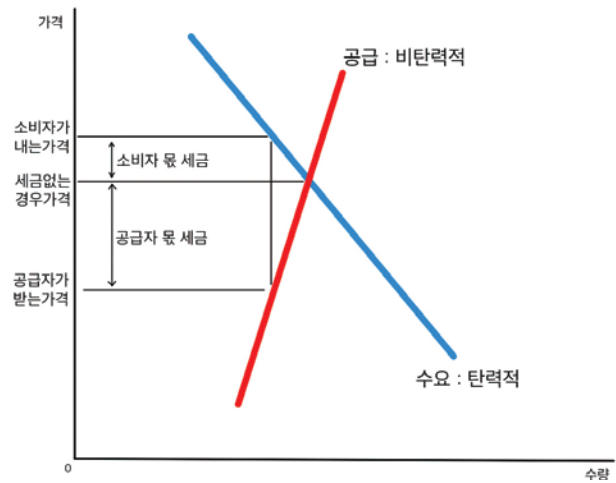


그림 4. 세금부담의 배분

따라 행동을 바꾸게 되면 그렇다는 뜻이다. 두 경우 모두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공급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 가격 차이는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되든 동일하다. 어느 경우든 이 간격으로 인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상대적 위치가 달라진다. 새로운 균형에서 소비자와 공급자는 세금을 나누어 낸다. 단지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탄력성과 조세의 귀착

어떤 재화에 세금이 부과되면 그 재화의 소비자와 공급자들이 세금을 나누어 부담한다고 했는데, 이때 세금 부담의 몫은 어떻게 결정될까? 반반씩 배분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세금 부담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림 3, 4 세금 부담의 배분]에 표시된 두 시장을 통해 세금의 효과를 살펴보자. 각 시장에는 최초 수요곡선, 최초 공급곡선, 세금에 따른 소비자의 가격과 공급자 가격의 차이가 표시되어 있다. 세금부과 이후 새로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그림에 표시되지 않았다. 어느 곡선이 이동하는 가는 정부가 납세자를 누구로 결정했는지에 달려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조세의 귀착 측면에서 두 경우는 차이가 없다. 위 [그림 3, 4]의 차이는 수요와 공급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있다.

[그림 3]은 공급이 탄력적이고(기울기가 완만하고)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기울기가 급한) 시장을 나타낸다. 즉 공급자들은 가격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반면, 소비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 시장에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으므로 공급자의 세금 부담은 크지 않고,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세금을 대부분 부담한다.

[그림 4]는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고 수요는 매우 탄력적인 시장을 나타낸다. 이 시장에서 공급자들은 가격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반면, 소비자들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르고, 수요곡선은 완만하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금이 부과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크게 상승하지 않지만,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한다. 따라서 공급자가 세금을 대부분 부담한다.

[그림 3, 4]를 보면 세금 배분의 일반적인 규칙을 알 수 있는데, 그 규칙은 탄력성이 낮은 쪽(비탄력적인 쪽)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탄력성은 소비자나 공급자가 시장 여건이 불리해졌을 때 시장을 떠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세금이 부과되어 가격이 오른 그 재화가 만일 유럽 고가 브랜드의 핸드백이라면, 소비자는 소비를 유보(留保)할 수 있을 것이다. 핸드백은 당장 필요한 필수품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요가 줄 것이고, 매출이 떨어져 적자가 나게 생긴 핸드백 공급자들은 업주와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해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세금은 고가 핸드백 공급자들에게 대부분 귀착될 것이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세금부과(賦課)로 가격이 오른 재화를 대체하거나 소비를 유보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소비를 멈추거나 대체하기 어렵다면 부과된 세금을 모조리 부담할 수도 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을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공급이나 생산을 줄여 균형가격을 올릴 수 있다면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고 소비자에게 세금을 전가(轉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글 첫 부분의 아이스크림에 세금을 부과하려면 시장님을 떠올려보자. 세금을 공급자와 소비자에게 공평하게 반반씩 부담시키려 했던 시장님의 선한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종합부동산세

IMF는 명목 GDP 기준으로 올해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브라질을 제치고 세계 10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인구 규모로 비교해 보면 현 정부의 자랑할 만한 성과임이 틀림없으나 후한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값 급등을 잡아내지 못한 탓이 가장 큰 이유가 될 듯하다. 세금부과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은 서울 강남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 같다. 아파트 입주자 카페의 급등한 가격정보에 관한 글을 보며 덕담하며 즐거워하다 가도, 오른 시세를 반영한 세금과 관련해서는 정부에 적대감을 분출한다.

정부의 세금부과는 세심하게 미리 살펴야 할 것이 많은 복잡한 일이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중산층 서민을 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정책이라 해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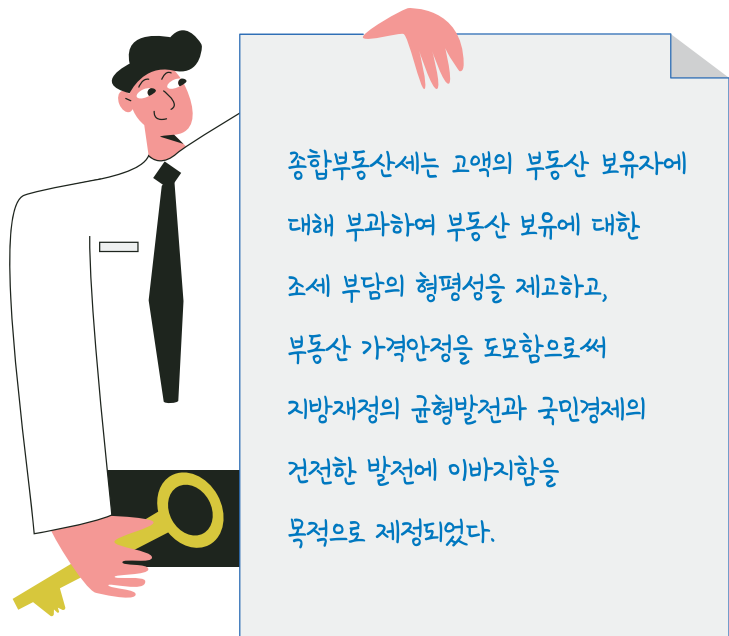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내게 되었다며 정부를 원망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얼마를 내는 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중

부세를 내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무주택자들의 입장에서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다. 올해 통계는 달라지겠지만, 종부세 대상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3%이고, 그 대상자 중 약 80%는 100만 원 미만을 납부한다고 한다. 종부세가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기엔 납세대상이 너무 적다. 중앙언론 종사자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주로 고가주택에 거주하므로 그들의 의견이 과잉대표 되는 것일 수 있고, 또는 장래에 고가 주택을 소유할 계획을 가진 국민들이 미리 걱정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종합부동산세의 개요와 대상

세금은 세금을 걷는 과세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다. 중앙정부는 국세청과 관세청을 통해 국세를 걷고, 지방정부는 지방세를 걷는다. 수출입에 관련된 물품에 대한 세금은 관세청에서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국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이다. 참고로 월급에서 매월 공제해가는 소득세는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에 포함된다. 원래 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의 소득을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우리와 같은 급여생활자들은 납부 편의상 고용주들이 급여에서 원천징수해서 납부하게 되어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일정금액 이하는 재산세로 과세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하는 이원적 성격의 조세이다. 또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인세(人稅)이다. 세대(世代)별 합산과세가 아니다. 부부가 각각 한 채씩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따로 합산해서 세금



을 부과한다. 주택 공시가격이 6억이 넘는 경우에만 납부대상이다. 만일 1세대 1주택자라면 6억에 3억을 더 얹어 9억까지 공제해준다. 즉 9억이 넘어야 종부세 대상이 된다. 사례로 설명을 하자면, 1세대 1주택인 경우 남편이나 아내 단독 명의로 공시지가 9억의 아파트를 소유해도 9억을 공제받아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이 공시가격이라는 것의 시가(時價)반영률이 60%쯤 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편차가 커서 정확히 말하긴 힘들다. 시가반영률 60%라는 말은 공시가격이 6억이면 실제 실거래가는 10억이란 얘기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9억이라면 시가 15억(시가 반영률 60%로 가정)까지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즘은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 공동소유를 하면 9억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부부 각각 6억씩, 총 12억을 공제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으로 공시지가 12억인 주택을 소유해도 부부 공동명이라면 부부 각각 6억 아파트 한 채씩 소유하는 것이므로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시가반영률 60%로 가정한다면, 시가 20억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이 아닐 수 있다. 1세대 2주택인 경우라도 부부가 각각 공시지가 6억 이하로 나눠서 소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

종부세 과세(課稅)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가액 또는 수량을 말한다. 간략하게 ‘과표’라고도 한다. 세금을 계산하려면 과세표준을 알아

야 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계산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소유자별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하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세대 1주택으로 남편이나 아내가 단독 소유하는 경우는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억에 3억을 더한 9억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95%란 과세표준을 5% 할인해주는 효과가 있다. 부동산 시장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승)으로 정한다.

서울 서초구의 전용면적 84.95㎡인 푸르지* 아파트의 종부세를 실제로 계산해 보자. 1세대 1주택이고 부부 공동소유하고 있고,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 내역을 찾아보면 26억 원을 넘지만,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은 18억1천만 원이다. 공동소유이므로 부부 각각 6억씩 공제하면 (18.1억 - 12억 = 6.1억) 6억1천만 원이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95%)을 곱하면 (6.1억 × 0.95) 5억7천9백5십만 원이 나온다. 뒤에 숫자가 많으니 깔끔하게 5억8천만 원으로 하자. 과세표준이 5억8천만 원으로 정해졌다. 이제 세율을 찾아봐야 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가 나온다. 종부세 세율은 과세 대상가액 구간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는 초과 누진세율이다. 근로소득 월 급여에 붙는 세금과 똑같은 초과 누진세율이다.

1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다.

3억 이하 : 0.6%	12~50억 : 1.6%
3~6억 : 0.8%	50~94억 : 2.2%
6~12억 : 1.2%	94억 초과 : 3%

푸르지*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5.8억 원이므로 3억까지는 0.6% 구간에 속하고 2.8억은 0.8% 구간에 속한다.

$$3\text{억} \times 0.006 = 180\text{만 원}$$

$$2.8\text{억} \times 0.008 = 224\text{만 원, 이 둘을 합하면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404만 원이다.}$$

404만 원이 좀 많아 보이지만, 이 세액을 다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 이 아파트에 재산세로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은 공제해야 한다. 하나의 재산에 대해 세금을 이중으로 걷지 않으므로 납부한 주택분 재산세는 공제하는 것이다.

푸르지* 아파트의 재산세를 구하면 약 371만 원이다.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60%)과 초과누진세율은 종부세와 다르다. 모든 주택 소유자가 내는 세금이므로 종부세보다 저렴하다. 재산세 계산과정은 생략하겠다.

이제 종부세액 404만 원에서 재산세 371만 원을 공제하면 실제 납부할 종합부동산 세액은 33만 원이다. 실제로는 종부세액 33만 원에 종부세의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종부세액의 20%)가 합해져 부과될 것이다. 실거래가 26억을 넘는(호가는 더 높을 수 있다) 강남 요지의 아파트 종부세가 33만 원이다. 끝이 아니다. 33만 원을 다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아직 공제받을 게 더 남았다. 연령별 세액 공제와 보유 기간별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강남의 고가주택 한 채만 지니고 사는 70세가 넘는 납세자라면, 보유 기간에 따라 60%에서 80%까지 공제해 준다. 위의 사례보다 더 고가인 아파트에 종부세 세액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도, 여기서 최대 80%까지 공제받아 40만 원을 납부한다. 일부 언론에서 집 한 채 지니고 은퇴한 노인들이 종부세 때문에 살 수 없다던 그 종부세 폭탄이 40만 원이다. 매달 40만 원이 아니고 일 년에 40만 원이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납부 세액의 150%를 세(稅)부담 상한으로 두고 있어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한다. 전년도 종부세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었다면 올해 집값이 급등해 세액이 200만 원이 되었다 해도 150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세금이 너무 올라 납세자가 당황하실까 봐 미리 상한을 정해 두었다.

윗글을 곱씹어 보면 또 분노할 일이다. 고가주택에 종부세를 과세하는 시늉만 하는 정부에 화를 내야 할 일이다. 이래서 집값이 잡히지 않는 거라고 불평할 수도 있다. 그런데, 위에 열거한 사례들은 대체로 1주택자들에게만 한정된다. 만일 수도권(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라면 어떨까? 다주택자들이라면 매우 다르다. 세율이 달라진다. 거의 두 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 연령별, 보유기간별 공제? 그런 거 없다. 올해 다주택자들은 세금 맛 좀 보실 거다. 집값 급등의 원인 제공자인 다주택자들에게 높게 과세하는 데 반대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들이 이 둘을 뒤섞어 구별이 안되게 만들었다. 관련한 정보가 부족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혼란스러운 정보를 유포한 듯 보인다. 대상을 정확히 모르면 막연한 두려움과 혐오만 커질 뿐이다.

위의 사례들은 몇 가지 가정을 전제로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시가변영률 60%로 추산하여 설명했다. 그리고 그 밖의 과세대상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례를 분석했다. 본인의 정확한 세액 계산은 전문가에게 확인하 시기 바란다. 세법은 대단히 복잡하고, 매년 개정된다. 